

 환경부 힘내라 대한민국	보 도 자 료		
	보도일시	2020년 5월 27일 조간 (5. 26. 11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	박륜민 과장 / 이주현 사무관
		대기미래전략과	044-201-6880 / 6881
		산업통상자원부	이민우 과장 / 김태우 사무관
자동차항공과	044-203-4580 / 4326		
배포일시	2020. 5. 25. / 총 8매		

공공부문 차량,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% 바꾼다

- ◇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 12.7%, 구매실적 27.6%
- ◇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강화, 기관별 실적 공개로 보유 비율 높일 계획

□ 환경부(장관 조명래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공공부문 1,508개*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(전기·수소차, 하이브리드차) 보유 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,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* 국가 56개, 지자체 262개, 공공기관 1,190개

-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,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,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,981대로 전체의 12.7%를 차지했다.
-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 5,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, 이 중 4,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.6%를 차지했다.
- 각 기관별 친환경차의 자세한 보유·구매실적은 환경부 누리집 (www.me.go.kr)의 '정보공개'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 상위기관 현황 >

구분	기관명	
보유실적 (40% 이상)	국가기관	행복청(55.6%), 기획재정부(47.8%), 환경부(46.5%) 등 10개
	지자체	제주도청(55.8%), 전북 진안군(41.7%), 충북도청(40.6%)
	공공기관	한국감정원(80.6%), 기술보증기금(77.1%), 한국환경공단(57.6%) 등 15개
구매실적 (70% 이상)	국가기관	국세청(90.6%), 과기부(77.7%), 산업부(75.0%) 등 16개
	지자체	대전 서구(100%), 광주교육청(100%), 인천 남동구(75.0%) 등 8개
	공공기관	주택금융공사(100%), 우체국시설관리단(100%), 신용보증기금(100%) 등 18개

※ 공공기관은 보유수량 50대 이상인 기관 중 상위기관의 실적

□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의무 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*의 실적 및 승합·화물차량,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을 구매한 실적도 금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.

*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

○ 다만,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(12.7%)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(2.5%)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‘대기환경보전법’과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’에 근거하고 있다.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.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.

○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.7%에서 2022년까지 35%로, 2030년까지 90%로 늘린다.

○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%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·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, 단계적으로 100%까지 상향한다.

○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자동차(경·소·중형), 화물자동차(덤프형·밴형),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.

○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,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.

○ 또한,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.

□ 김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“공공부문이 전기·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

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“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, 전기·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붙임 1.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·임차 현황.
2. 국가기관별 친환경차 보유현황.
3. 국가기관별 친환경차 구매·임차현황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이주현 사무관(044-201-68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

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·임차 현황

□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('19.12월말 기준)

(단위: 대)

구분	총계	친환경차			휘발유차, 경유차 등
		소계	전기·수소	하이브리드	
국가기관	30,130 (100.0%)	2,750 (9.1%)	1,191 (4.0%)	1,559 (5.1%)	27,380 (90.9%)
지자체	54,831 (100.0%)	6,410 (11.7%)	5,077 (9.3%)	1,333 (2.4%)	48,421 (88.3%)
공공기관	33,353 (100.0%)	5,821 (17.5%)	2,084 (6.3%)	3,737 (11.2%)	27,532 (82.5%)
소계	118,314 (100.0%)	14,981 (12.7%)	8,352 (7.1%)	6,629 (5.6%)	103,333 (87.3%)
전체 자동차	23,677,366 (100.0%)	601,048 (2.5%)	95,001 (0.4%)	506,047 (2.1%)	23,076,318 (97.5%)

□ 공공부문 승용차 친환경차 보유 현황('19.12월말 기준)

(단위: 대)

구분	총계	친환경차			휘발유차, 경유차 등
		소계	전기·수소	하이브리드	
국가기관	13,508 (100.0%)	1,691 (12.5%)	188 (1.4%)	1,503 (11.1%)	11,817 (87.2%)
지자체	19,481 (100.0%)	6,221 (31.9%)	4,923 (25.3%)	1,298 (6.7%)	13,260 (68.1%)
공공기관	17,660 (100.0%)	5,723 (32.4%)	2,054 (11.6%)	3,669 (20.8%)	11,937 (67.6%)
소계	50,649 (100.0%)	13,635 (26.9%)	7,165 (14.1%)	6,470 (12.8%)	37,014 (73.0%)
전체 승용차	19,177,517 (100.0%)	598,705 (3.1%)	92,994 (0.5%)	505,711 (2.6%)	18,578,812 (96.9%)

□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·임차 현황('19년)

(단위: 대)

구분	총계	친환경차			휘발유차, 경유차 등
		소계	전기·수소	하이브리드	
국가기관	4,191 (100.00%)	1,501 (48.3%)	1,063 (34.3%)	438 (14.0%)	2,690 (86.7%)
지자체	6,377 (100.00%)	1,088 (17.06%)	790 (12.39%)	298 (4.67%)	5,289 (82.94%)
공공기관	4,895 (100.00%)	1,681 (34.34%)	479 (9.79%)	1,202 (24.56%)	3,214 (65.66%)
소계	15,463 (100.0%)	4,270 (27.6%)	2,332 (15.1%)	1,938 (12.5%)	11,193 (72.4%)
전체 자동차	1,811,504 (100.0%)	139,298 (7.6%)	38,335 (2.1%)	100,963 (5.5%)	1,672,206 (92.4%)

구분	계	친환경차		휘발유차, 경유차 등	친환경차 보유비율
		전기·수소	하이브리드		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	9	3	2	4	55.6%
금융위원회	9	0	5	4	55.6%
기획재정부	23	2	9	12	47.8%
환경부	486	63	163	260	46.5%
방위사업청	13	0	6	7	46.2%
중소벤처기업부	50	2	21	27	46.0%
국세청	308	3	134	171	44.5%
방송통신위원회	9	1	3	5	44.4%
국방부	23	7	3	13	43.5%
조달청	47	0	19	28	40.4%
국무조정실	13	0	5	8	38.5%
산업통상자원부	40	7	8	25	37.5%
고용노동부	167	0	56	111	33.5%
공정거래위원회	12	0	4	8	33.3%
국가보훈처	125	1	40	84	32.8%
국무총리비서실	16	2	3	11	31.3%
국가인권위원회	16	0	5	11	31.3%
국민권익위원회	14	1	3	10	28.6%
감사원	32	2	7	23	28.1%
해양수산부	338	4	84	250	26.0%
보건복지부	210	0	54	156	25.7%
외교부	47	1	11	35	25.5%
여성가족부	8	0	2	6	25.0%
식품의약품안전처	232	1	56	175	24.6%
문화체육관광부	127	2	28	97	23.6%
인사혁신처	18	0	4	14	22.2%
기상청	128	1	25	102	20.3%
법제처	5	0	1	4	20.0%
새만금개발청	10	0	2	8	20.0%
과학기술정보통신부	5,647	1,031	61	4,555	19.3%
행정안전부	121	1	21	99	18.2%

구분	계	친환경차		휘발유차, 경유차 등	친환경차 보유비율
		전기·수소	하이브리드		
통일부	62	0	11	51	17.7%
농림축산식품부	792	4	135	653	17.6%
관세청	435	2	65	368	15.4%
특허청	21	1	2	18	14.3%
교육부	28	0	4	24	14.3%
법무부	1,246	5	168	1,073	13.9%
국회(국회사무처)	45	3	3	39	13.3%
국토교통부	630	25	46	559	11.3%
문화재청	81	0	8	73	9.9%
헌법재판소	23	0	2	21	8.7%
원자력안전위원회	14	0	1	13	7.1%
농촌진흥청	115	0	8	107	7.0%
검찰청	519	2	27	490	5.6%
병무청	81	1	3	77	4.9%
대법원(법원행정처)	439	0	20	419	4.6%
선거관리위원회	398	1	15	382	4.0%
통계청	338	1	11	326	3.6%
해양경찰청	653	0	16	637	2.5%
산림청	635	0	13	622	2.0%
소방청	141	0	2	139	1.4%
경찰청	15,121	11	154	14,956	1.1%
개인정보보호위원회	3	0	0	3	0.0%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	1	0	0	1	0.0%
국민경제자문회의	2	0	0	2	0.0%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	4	0	0	4	0.0%

붙임3

국가기관별 친환경차 구매·임차현황('19.1~12월 기준)

구분	계	친환경차		휘발유차, 경유차 등	친환경차 구매비율
		전기·수소	하이브리드		
공정거래위원회	1	0	1	0	100.0%
국회(국회사무처)	1	0	1	0	100.0%
금융위원회	2	0	2	0	100.0%
법제처	1	0	1	0	100.0%
외교부	1	1	0	0	100.0%
특허청	1	1	0	0	100.0%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	1	0	1	0	100.0%
국세청	32	0	29	3	90.6%
국가보훈처	10	0	9	1	90.0%
국방부	8	5	2	1	87.5%
국무총리비서실	6	2	3	1	83.3%
과학기술정보통신부	1,300	1,000	10	290	77.7%
병무청	4	1	2	1	75.0%
산업통상자원부	8	4	2	2	75.0%
조달청	10	0	7	3	70.0%
통계청	10	1	6	3	70.0%
관세청	18	0	12	6	66.7%
환경부	145	26	63	56	61.4%
국무조정실	7	0	4	3	57.1%
감사원	2	1	0	1	50.0%
국민권익위원회	2	0	1	1	50.0%
방위사업청	2	0	1	1	50.0%
헌법재판소	2	0	1	1	50.0%
해양수산부	69	1	33	35	49.3%
농림축산식품부	111	0	49	62	44.1%
식품의약품안전처	41	1	16	24	41.5%
기상청	24	1	7	16	33.3%
문화체육관광부	9	1	2	6	33.3%
중소벤처기업부	3	1	0	2	33.3%
해양경찰청	30	0	9	21	30.0%
법무부	93	0	27	66	29.0%

구분	계	친환경차		휘발유차, 경유차 등	친환경차 구매비율
		전기·수소	하이브리드		
국가인권위원회	4	0	1	3	25.0%
고용노동부	9	0	2	7	22.2%
보건복지부	27	0	6	21	22.2%
국토교통부	95	10	10	75	21.1%
기획재정부	5	1	0	4	20.0%
행정안전부	13	1	1	11	15.4%
검찰청	67	0	8	59	11.9%
경찰청	1,884	4	107	1,773	5.9%
산림청	50	0	2	48	4.0%
개인정보보호위원회	1	0	0	1	0.0%
교육부	3	0	0	3	0.0%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	1	0	0	1	0.0%
국민경제자문회의	1	0	0	1	0.0%
농촌진흥청	3	0	0	3	0.0%
대법원(법원행정처)	42	0	0	42	0.0%
문화재청	9	0	0	9	0.0%
소방청	15	0	0	15	0.0%
인사혁신처	4	0	0	4	0.0%
통일부	4	0	0	4	0.0%
원자력안전위원회	0	0	0	0	-